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변나향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수급 관리 부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계획, 이용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등의 문제 제기
- 공공건축의 통합적 관리,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지원, 디자인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건축 지원 조직 필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한계

정책제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 조성·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지정을 법제화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조직 현황, 인적 구성, 사업 규모와 유형, 전문가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절차, 조직 구성 방안을 마련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간 정책 지원, 교육 및 홍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 협력 체계 마련

1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의 중요성

■ 복지 · 교육 · 안전 ·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 강화

- 현 정부에서는 사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국민의 품위 있는 삶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복지 · 교육 · 교육 · 안전 · 환경 등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
 - 공공임대주택, 아동 · 청소년 · 노령층을 위한 복지시설,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시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의 공급 확대 노력
 -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하여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공공병원, 지역아동센터 등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생활SOC 투자과제 중 공공건축 관련 사업 현황

분야	투자과제	주요 투자사업	규모
여가 · 건강 활동	문화 ·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국민체육센터(160개소) •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50개소)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450개소) 및 주차장 신규 조성(45개소)	1.1조 원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 설치(7개소) • VR · AR 체험존(19개 시설)	0.6조 원
생활 안전 · 환경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1,200개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41개소)	0.4조 원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500억 원)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5만 개)	2.3조 원

※ 출처 :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공개 자료(2018.8.27), p.4.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건축 조성 사례 증가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건축 조성 추진
 - 학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 · 문화 · 체육 정책이 실현되는 물리적인 공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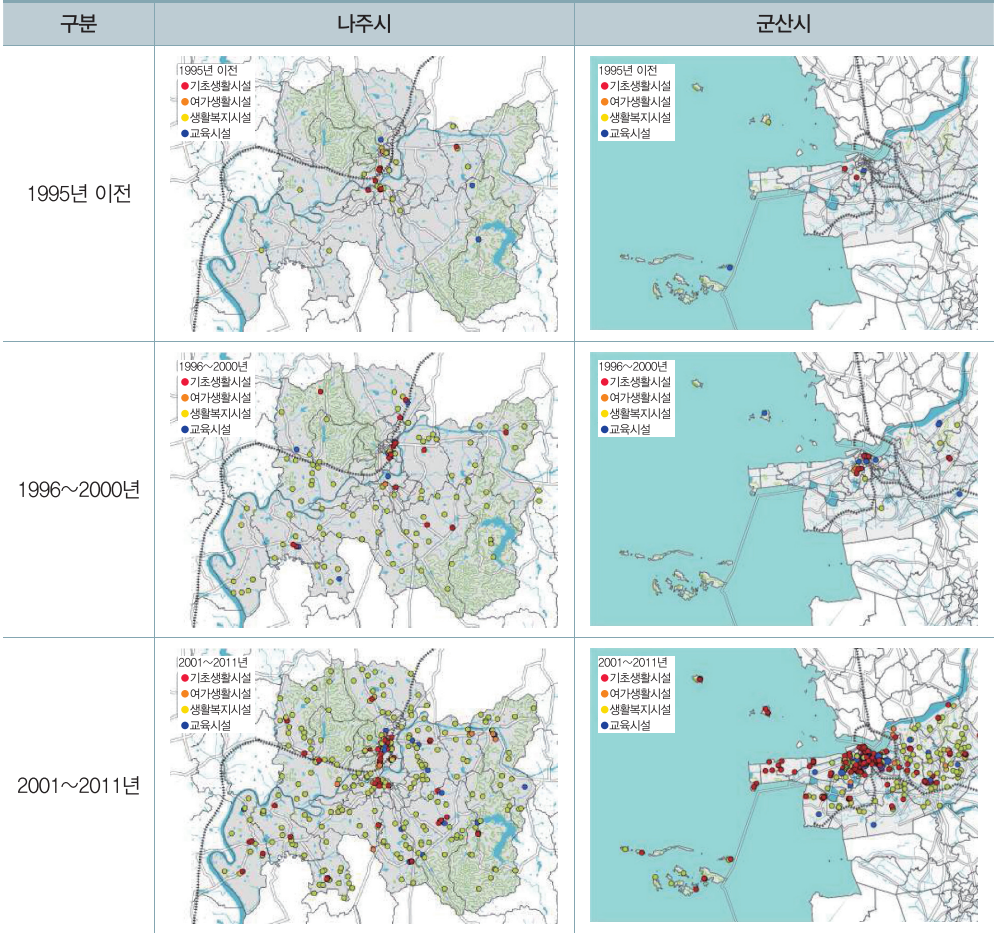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이지 않는 문턱을 낮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격차가 시민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전략기지로써 공공도서관의 품질을 높여가겠다.”

-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 인터뷰

※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56279?tr_code=snews\(2018.5.10.\)](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56279?tr_code=snews(2018.5.10.))

-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건축은 일상생활 장소와 인접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역에 분포
 - 공공건축 조성은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도심 확장과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며, 시가지 전 지역에 분포
 -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중심지와 주거지역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장소와 인접한 위치에 조성되며, 일상생활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

나주시와 군산시 시기별 공공건축 분포 현황



※ 출처 : 차주영 외(2011),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0, p.164 재편집.

■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은 전체 공공부문 공사 물량의 과반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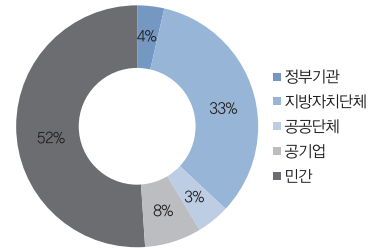
- 전체 건설공사 중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건수는 공공부문 전체의 69%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기업, 주한외국기관, 민간의 2015년도 공사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69만 5,000여 건의 공사 중 23만여 건(33.19%)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이며, 공공부문 공사 계약 건수 중에서는 69%를 차지

발주기관별 공사 계약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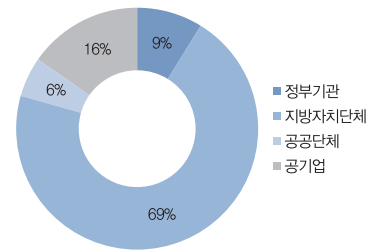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건수	비율(%)	금액 (10억 원)	비율(%)	건수	비율(%)	금액 (10억 원)	비율(%)
합계	664,455	100	209,016	100	695,955	100	264,189	100
정부기관	27,623	4.16	9,198	4.40	29,536	4.24	10,316	3.90
지방자치 단체	220,310	33.16	21,585	10.33	230,985	33.19	22,665	8.58
공공단체	20,392	3.07	9,485	4.54	21,769	3.13	10,623	4.02
공기업	51,095	7.69	23,964	11.47	52,575	7.55	24,669	9.34
주한 외국기관	834	0.13	438	0.21	701	0.10	287	0.11
민간	344,201	51.80	144,342	69.06	360,389	51.78	195,628	74.05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자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http://kosis.kr>.

발주기관별 공사 비율(2015)



공공부문 공사 비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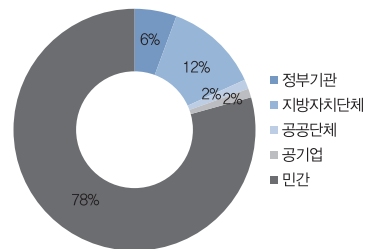
- 건축공사 중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건수는 공공부문 전체의 57%
 -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 분야 중 토목과 산업설비, 조경을 제외한 건축공사 부문에 대한 공사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건수가 공공부문 전체의 57%를 차지

발주기관별 건축공사 계약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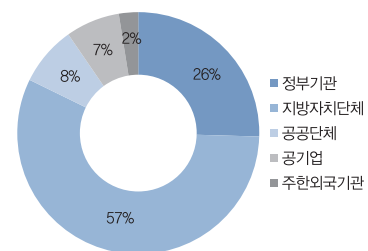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건수	비율(%)	금액 (10억 원)	비율(%)	건수	비율(%)	금액 (10억 원)	비율(%)
합계	49,593	100	104,932.0	100	46,183	100	138,792.5	100
정부기관	3,253	6.56	3,168.9	3.02	2,549	5.52	2,599.6	1.87
지방자치 단체	7,581	15.29	4,358.2	4.15	5,702	12.35	4,602.9	3.32
공공단체	992	2.00	1,990.4	1.90	828	1.79	1,385.5	1.00
공기업	804	1.62	6,889.4	6.57	714	1.55	6,359.2	4.58
주한 외국기관	320	0.65	253.4	0.24	203	0.44	120.4	0.09
민간	36,643	73.89	88,271.5	84.12	36,187	78.36	123,724.6	89.14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http://kosis.kr>.

발주기관별 건축공사 비율(2015)



공공부문 건축공사 비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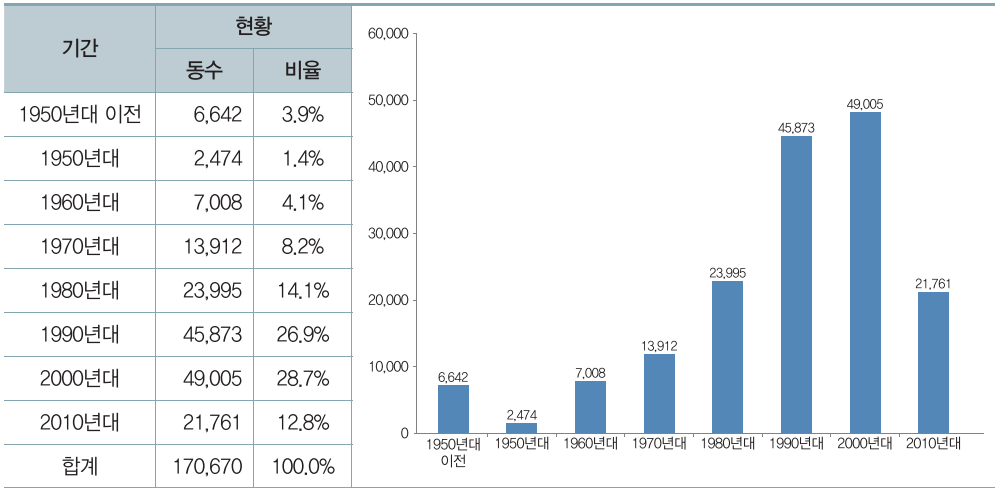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 조성·관리의 문제점

■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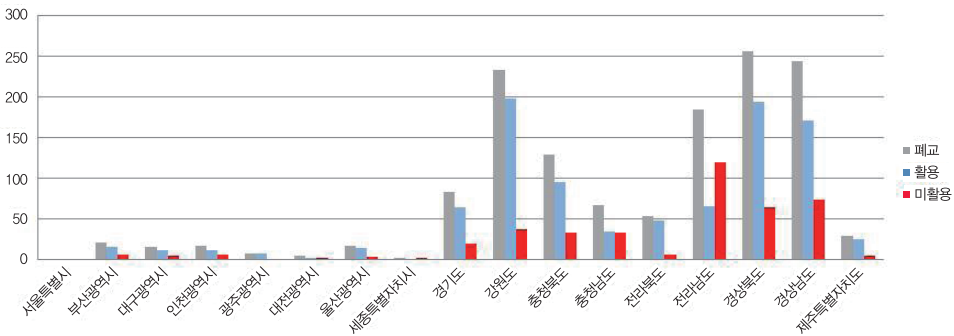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수와 면적, 경과 연도는 계속 늘고 있으나 보유 자산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 노후도, 재고 파악 현황은 미흡
 -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가장 많이 준공되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수가 7만 7,519동으로 전체 공공건축물의 45.4%를 차지함

사용승인 연도별 공공건축물 동수 현황



※ 출처 : 차주영 외(2015), 「2015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 p.3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폐교 활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82개 도시의 철도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공공시설의 이용 현황, 유휴 공간 현황 파악 및 재고 관리는 미흡한 상황임



지역별 폐교재산 현황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현황에 근거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도, 인구 특성, 지역의 쇠퇴 정도, 재정 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수급관리 필요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 부재

- 지역 특성과 이용자 수요 파악 미흡
 - 공공건축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 또는 공무원이 해당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용도와 운영 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거친 29개 공공도서관 사업 중 6건(20.7%)만이 주민 수요조사를 거치는 등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함
- 지역 현황과 시설 이용자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업 기획 필요
 -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 수요, 규모, 스페이스 프로그램, 입지 선정, 시설 운영, 비용편익 등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서비스 수요 대상 인구 수 기준에 따라 시설 공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과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와 규모를 산정할 필요

■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 조성 및 디자인 관리 미흡

- 공공건축 조성 시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품질 확보 노력 미흡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대다수 공공건축 사업계획은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수립되고 인근 유사 시설에 대한 검토, 공공공간과 연계, 주변 환경과 조화 측면에서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 시설 개수와 면적, 서비스 인구 등 시설의 양적 측면에 치중하여 합리적인 설계와 설계·시공 과정의 디자인 향상 노력은 미흡
-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문제에 접근하고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 공공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이기보다 공공서비스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며,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으로 이루어진 공공영역(public realm)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공공건축 조성 시 지역 전체 맥락 속에서 역할을 고려할 필요
 - 공공건축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조성 전 단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

3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및 조직 운영 현황과 한계

■ 공공건축의 효율적 수급과 품질 향상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조직 신설

-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인식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 관련 조직을 갖추기 시작
 -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화 계획(2008)’은 지역 공공건축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첫 사례로, 이후 영주시 ‘도시디자인관리단(후에 ‘도시건축관리단’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는 계기가 됨
 -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지방자치단체별 공공건축 관련 조직 설립 현황

조직명(설립 연도)	특징	공공건축 관련 주요 업무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2010)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통한 기획 내실화	• 통합 마스터플랜 기획 · 연구용역 자문 • 공공건축물 경관 자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2018)	공공건축 건립 효율화를 위한 자체 조직 신설	• 공공건축물 공사(증축 · 개축, 리모델링 포함) · 용역 · 관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2012)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 강화	• 타당성 검토,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2015)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 · 설계 관리	• 공공건축 기획업무, 설계공모 운영 · 관리, 설계 모니터링, 업무지침 및 가이드라인 수립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4)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컨설팅 수행	• 공공건축 디자인 컨설팅, 가이드라인 수립

■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 체계 강화 노력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 · 체육 · 노인복지 등 개별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시설의 적정한 규모와 예산,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
 - 일반적으로 건축과의 공공건축 담당이 공공건축사업의 공사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품질 확보에 한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 설비 · 시공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건축 전담 부서를 신설 · 확대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6년에 균형발전국 행정도시지원과에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 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공공건설사업소를 설치하여 공공건축물의 공사 · 용역 · 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2011년에 건설교통국 시설조성과와 회계과 청사관리팀을 합병하여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를 신설함
-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등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
 - 가격 입찰로 공공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비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에는 설계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설계공모 적용 금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에도 우수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영주시,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등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

■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건축 관련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조직은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한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으며, 법정업무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은 ‘영주시 경관 조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관리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조직의 구성과 주요 업무를 규정

■ 공공건축가 등 전문 인력 활용의 지속성과 실행력 담보에 한계

- 민간전문가의 위상과 권한,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
 - 영주시의 도시건축관리단장, 서울시의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민간전문가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설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자문 형태로 개입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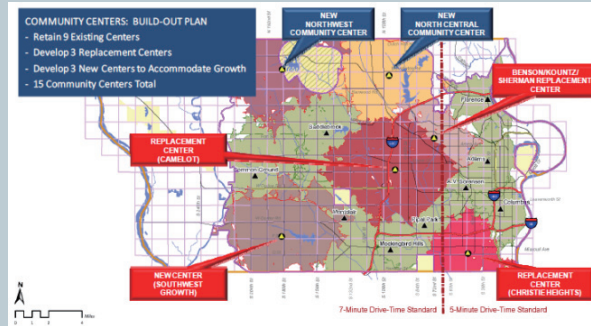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 전제

- 조직의 설립과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으며, 법정업무 대상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 지원 업무를 실효성 있게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설립·지정 요건과 절차, 업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 필요
-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
 - 지자체 조사 결과,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조직 현황에 큰 편차를 보였으며,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임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조직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할 필요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구분 없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 공공건축 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와 연관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
 - 광역 단위의 센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구분 없이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추진 목표와 주요 업무

-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건축 통합계획을 수립
 - (공공건축 관련 자료 구축 및 관리의 내실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현황, 이용과 재정 현황 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지역 우수 공공건축 조성 사례를 발굴·홍보
 -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지역 공공건축의 효율적 활용과 적절한 공급을 위해 지역별 공공건축 실태에 기반하여 향후 수요를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계획과 유지·관리 전략을 담은 통합계획을 수립할 필요

※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사례 : 미국 오마하시 공공시설 마스터플랜(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City of Omaha, US)
미국 오마하시에서는 도시 성장에 따른 도시 내 토지 이용과 인구 변화를 예측하여 도시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고용과 서비스 수요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와 하수, 공공 안전 서비스(소방서, 경찰서), 공원, 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의 시설 수요, 관리 비용, 고용 인력 등을 예측하고 시설 재배치, 신설 등 계획을 수립하였다.



커뮤니티센터의 확장(중장기 재배치 및 신설) 계획안과 서비스 범위

※ 출처 : BCDM ARCHITECTS · DSA, Inc.(2012) City of Omaha: 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section4, p.10.

- 지역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 업무를 내실화하고 계획 내용과 관련 기준을 검토
 - (사업 기획 업무 수행 및 지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 부서의 기획 업무를 지원.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 주요 내용, 사전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사업 추진 방식, 프로그램, 발주 방식, 예상 문제점을 검토
 - (시설계획 및 관련 기준 검토) 입지 여건과 지역 수요를 분석하여 배치계획과 시설 계획의 주안점을 제시하고 시설별로 적용되는 계획 기준과 지침, 인증 사항을 검토
- 수준 높은 공공건축 실현과 디자인 관리를 위해 적정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공공건축 조성 전 단계에 걸쳐 디자인 관리
 - (우수 설계자 선정 지원) 사업 특성과 발주 부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발주 방식을 제안
 -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시공 발주 방식을 검토하고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를 고려하여 사업관리체계와 준공 이후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공공건축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계획에서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구성(안)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예산 및 조직 구성 방안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 · 운영
 -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 수행 시 공공건축 조성 ·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 조직 내 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
 - 외부 지원조직 형태는 센터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계 부서와 직접적인 협의가 어렵고 실행력에 한계
 - 행정조직 내 센터를 설치할 경우 발주 부서 간 협의가 용이하며 지역 실정과 수요 파악에 유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형태 대안 비교

구분	행정조직	외부 지원조직
조직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공공기관
장점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직 내 협의체계 활용• 지방자치단체 부서 내 설치• 지역 수요 파악 유리• 업무 기획 및 추진의 효율성</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직 내 협의체계 활용• 공기업 · 지방공사 직영 또는 위탁• 센터 구축 조기화 가능</div>
단점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발주 주체와 센터 일원화 문제</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조직 위치(별도 부서 마련 또는 관련 부서에 추가)• 업무 분담 필요</div>
센터 사례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한옥지원센터(2015.9, 서울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4.3,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div>

5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관할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지정을 법제화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내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현황을 고려한 공공건축 지원 전략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조직 현황, 사업 규모와 유형, 공무원 인적 구성과 지역 전문가 참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업무 범위와 절차, 조직 구성 방안을 마련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업 방안 모색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광역·기초 단위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간 정책 지원, 교육 및 홍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 협력체계 마련
- 또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행정 담당자, 실무자, 전문가 등 공공건축 조성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 모색

임유경 부연구위원 (044-417-9615, yklim@auri.re.kr)

변나향 부연구위원 (044-417-9850, nhbyun@auri.re.kr)

박석환 연구원 (044-417-9659, shpark@auri.re.kr)

